

민주 27일 예비경선... 여성할당 없던일로

지도체제 경선규칙 의결 전국·지명직 최고위원제 도입 전준위 '여성할당' 재고 요청 최고위, 이르면 내일 재논의

더불어민주당은 4일 최고위원회에서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 및 권역별 최고위원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차기 지도체제 선출방법을 의결했다.

에초 최고위원 선출 과정에서 상위 5명에 여성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5위 남성 대신 여성 중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기로 했던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의 '여성할당' 제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준위가 최고위에 재고를 요청하고 나서 '여성 할당' 부분은 최고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등 당헌 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의를 13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며 "회의에서는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에서 의결한 차기 지도체제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방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백 대변인은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 체제를 유지하고, 권역 및 부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며 전국 선출 최고위원 및 지명직 최고위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은 분리 선출하고, 전국 선출 최고위원은 5명, 지명직 최고위원은 2명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여성 할당' 부분 제외에 대해서 백 대변인은 "청년 문제도 있고, 오히려 이 규정이 '여성'은 당연히 입성하니 안쪽에도 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오른쪽)과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는 식의 남성 후보 측 선거운동으로 여성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우리 당이 청년이나 여성이 많이 진출했고 저변이 넓기 때문에 충분히 청년, 여성 최고위원 선출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어떤 대표가 되더라도 지명직 최고위원 선정에 있어 여성, 청년, 노인에 대한 배려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회의에서는 청년 최고위원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여성 배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논란 끝에 일괄 폐지되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예비경선은 당 대표 후보 4명 이상, 최고위원 후보 9명 이상일 경우 각각 실시하며, '컷오프'를 거친 본경선 경합후보 수는 대표 3명, 최고위원은 8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예비경선은 오는 27일 치른다.

백 대변인은 "예비경선 및 본경선 모두 당 대표의 경우 1인 1표, 최고위원은 1인 1표 2인 연기명(투표자 1인이 2명에게 기표) 방식으로 진행한다"며 "합산비율은 전국대의원 투표 45%(현장투표), 권역당원 투표 40%(ARS 투표), 일반당원 여론조사 5%, 국민여론조사 10%를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이날 회의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단수 추천한 148명의 지역위원장 인선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여성 할당'이 제외된 최고위 회의 결과가 알려지자 전준위는 당 지도부에 재고를 요청했다.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여성 최고위원 문제와 관련 전준위 원안대로 해 줄 것을 전준위 전체 의결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제안했다"고 전했다.

전준위의 재논의 요청에 따라 이르면 6일 최고위원회에서 여성 최고위원 문제가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중부세 인상' 격돌

여 "부동산 안정위해 필요"...한국당 "편가르기 과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중부세) 단계적 인상 등 재정개혁 권고안을 두고 4일 여야가 충돌하면서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개혁 권고안에 동의하며 환영하는 세부 조정을 위한 추가 당정협의를 시사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편가르기 과세"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함께 권고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보완할 점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적 과세이자 편 가르기 증세"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함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혐미경 심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윤재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세금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경제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심의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통화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핀셋조세가 아니라 보편 증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도 부정적이다. 장병안 원내대표는 (평화당)도 "시장 여파를 주시하면서 세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동욱 기자 tuim@

한국당 '연대'로 난국 돌파?

개헌·선거제 개편 고리 러브콜...국회 주도권 잡기 수싸움

여야가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한 가운데 개혁입법과 개헌, 선거구제 개편 등을 앞세우며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수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정의당과의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하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반면 한국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고리로 다른 야당을 끌어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며 맞대응하는 상황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관계개편안이 안됐다고 31년 만의 개헌을 건어치는 행위는 국민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전남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한국당이 정부 개헌안을 사실상 폐기처분했다. 그런데 갑자기 원 구성을 앞두

고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한 걸 반박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전향적인 입장을 통해 선거제도의 대변혁을 이끌어내겠다"면서 군소야당에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에서 한국당에 대해서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이 무산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여당이 강조하는 개혁입법연대에 대해서는 "민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적극 동참하겠으나 국회 내 과반에서 몇 석이 남으니 뭉든 할 수 있다는 인식은 국회 관행과 원칙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평화당 "美 관세 폭탄 선제 대응해야"

광주 지역구 의원들 성명

민주당 평화당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미국 행정부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25%의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한국 정부의 선제적 대책을 촉구했다.

평화당 장병안 원내대표와 천정배·최경환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미국발 25%의 관

세 폭탄이 떨어진다면 향후 5년간 대미 수출 순손실 74조원, 64만6000여명의 일자리 손실이 예상된다"며 "특히 광주는 수출액의 40%, 총생산액의 32%를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이 초토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전쟁은 전 세계 소비자의 후생만 후퇴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친문 '부영이 모임' 뜨거운 감자

민주 당권구도 가열 속 관심...일각 편가르기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의 8·25 전국대의원대회(전대) 당권 경쟁구도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와중에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의 '부영이 모임'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부영이 모임이 전대 후보군의 대표주자 정리 문제와 맞물리자 당 내외에서 '편가르기' '계파주의'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해당 모임의 의원들이 곤혹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4일 "춥물로 정권을 만든 상황에서 유한한 재원을 소수가 나눠 먹겠다는 것이 계파주의"라며 "나만이 문재인 정부를 성공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후진적 정치행태이며 말하는 지름길"

이라고 지적했다.

표창원 의원은 트위터에 "좋은 취지들이겠으나 불필요한 조직 내 갈등의 빌미가 된다"며 부영이 모임을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 글을 올렸다.

야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지난 시절 최고 권력자에게 기댄 계파 모임이 정치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30여명 규모의 부영이 모임은 박광온·전해철·권철승·김종민·황희·홍영표 등 참여정부 청와대 출신이나 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영입한 인사들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 기자 jkpark@

평화당 전대 다시 '1인2 표제'로

정동영 "수용하겠다"

민주당 평화당은 4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5 전당대회 투표방식을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의 '1인1표제' 결정을 뒤집고 '1인2표제' (연기명)로 최종 결정했다.

평화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전준위가 투표방식으로 제안한 '1인1표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는 "당헌에 따라 1인2표제로 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이어졌고, 결국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6명 만장일치로 '1인2표

제'가 통과됐다.

그동안 평화당 당권 주자들은 투표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정동영 의원은 후보간 짝짓기 등 합중연형에 따른 중의 왜곡의 맹점을 거론하며 '1인1표제'를 주장해 왔고, 유성엽·최경환 등 다른 주자들은 대표와 최고위원을 함께 뽑는 집단지도체제에선 '1인2표제'가 관행이라며 맞서왔다.

최경환 대변인은 '마라톤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의 단합과 화합이 중요한 만큼 최고위원회에서 1인2표제를 하는 것으로 당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1인1표제'를 주장해온 정동영 의원은 "당 화합을 위해 오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지경 기자 jkpark@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 - 14억
- 급매 - 8억 8천만원 (분할매매 가능)
- 문의. 010-6834-7400

